집합행동의 논리와 도덕경제: 합리성, 도덕적 분노, 그리고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정치학과 박사과정 정성일

I. 문제 제기

공동의 이익을 가진 집단은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가? 합리적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집합행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가? 전통적 집단이론은 이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해 왔다. 그러나 맨슈어 올슨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합리적 개인은 집합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무임승차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스콧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동남아시아의 농민들은 왜 압도적인 군사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는가? 선택적 유인도, 강제도 없었다. 올슨의 논리라면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집합행동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다. 스콧의 답은 도덕경제였다. 농민들은 이익 계산이 아니라 도덕적 분노에서 행동했다.

두 이론은 정반대처럼 보인다. 하지만 집합행동의 구조적 조건을 해명한 올슨과, 도덕적 분노라는 동력을 포착한 스콧을 함께 읽을 때, 민중이 왜 불가능해 보이는 저항에 나서는지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II. 올슨의 집단행동 논리: 합리성의 역설

1. 집합재의 역설과 무임승차 (1·2장)

올슨은 집합재의 논리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집합재란 "구성원이 $X_1,\cdots,X_i,\cdots,X_n$ 등 N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내에서 어떤 개인 X_i가 그것을 소비하면 그 집단 내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기회가 배제되지 않는 재화"다(올슨, 19쪽). 비배제성이 문제의 핵심이다.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합리적 개인은 왜 비용을 부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집단 크기가 결정적 변수로 등장한다. 소규모 집단에서는 한 구성원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발적 조직화가 가능하다. 구성원이 집합재에서 얻는 이익의 비중(F_i)이 크면 혼자서라도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잠세적 집단)에서는 어느 개인의 기여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F_i가 극소화된다. 그 결과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그 집단은 자신의 공동이익을 덜 증진하려 할 것이다"(올슨, 58쪽),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은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2장은 이 논리를 경험적·이론적으로 확인한다. 소규모 집단이 역사적으로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더 뛰어난 기술이나 방법 때문이 아니었다. 소규모 집단은 처음부터 조직화에 유리한 구조적 조건에 있다. 또한 사회적 유인(압력, 우정, 규범)도 서로 대면 접촉이 가능한 소규모 집단에서만 작동하며 대규모 잠세적 집단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2. 부산물 이론과 잊혀진 집단들 (6장)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조합, 전문직능단체, 농업단체 같은 대규모 압력단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슨은 부산물 이론으로 그 답을 내린다. 이 조직들이 유지되

는 이유는 로비 성과(집합재) 때문이 아니다. 유니언숍 같은 강제 가입, 전문직 자격과 연계된 강제, 협동조합의 사업 서비스 같은 비정치적 선택적 유인이 조직을 유지시킨다. 로비력은 이 비정치적 기능의 부산물로 따라온다.

올슨은 앞서 "오직 개별적이고 선택적인 유인만이 어느 한 잠세적 집단에 속한 합리적 개인이 집단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올슨, 83쪽)고 말했다. 선택적 유인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 집단—소비자, 납세자, 이주 노동자—은 공동이익이 있음에도 조직화되지 못한다. 조직화되지 못한 대규모 집단은 결국 "침묵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올슨, 259쪽). 반면 반면에 소규모 집단인 기업계는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압도적인 로비력을 행사한다. 올슨의 논리는 현실 정치에서 왜 소수의 특수이익이 다수의 공공이익을 체계적으로 압도하는지를 설명한다.

III. 스콧의 도덕경제: 합리성의 다른 구조

1. 안전제일 원칙과 합리성의 재정의 (1장)

스콧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팝킨과의 논쟁을 회고하며 "아냐, 아냐, 아냐. 나는 비합리적인 농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냐. 이 농민은 신고전파가 말하는 합리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특정한 억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바로 알 수 있어. 가령, 식량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죽고 싶지 않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스나이더, 237쪽)라고 말했다. 즉 스콧의 농민도 합리적 행위자다. 다만 합리성의 준거가 다를 뿐이다.

이 준거가 안전제일 원칙이다. 생계유지선 근처에서 살아가는 농민에게는 기대이익 극대화보다 최악의 결과 회피가 합리적이다. "물속에서 물이 턱까지 찬 상태로 서있기 때문에 물결이 조금만 일어도 익사하게 될 지경"(스나이더, 235쪽)에 있는 농민에게는 안전제일 선택이 합리적이다. 새로운 기술이 평균 수익은 높아도 변동폭이 크면 채택하지 않는 것, 환금작물보다 생계작물을 선호하는 것이 모두 이 논리의 발현이다.

착취의 기준도 여기서 달라진다. "농민은 얼마나 가져가는가를 묻기 전에 얼마나 남는가를 묻는다"(스콧, 52쪽). 고정 과세(B선)는 가변 과세(C선)보다 총 수탈량이 적더라도, 흉작 때 생계위기선 이하로 농민을 밀어넣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더 착취적으로 경험된다. 착취의 판단 기준은 수탈의 절대량이 아니라 생계 안전성의 침해 여부였다.

2. 도덕경제의 위반과 반란 (5·6장)

5장은 스콧의 이론을 역사적으로 확인한다. 1930년대 대공황기 베트남과 버마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 반란의 공통 구조는 단순하다. 쌀 가격이 폭락해 수입이 급감했음에도 식민지 국가는 인두세—고정 과세의 전형—를 고집하거나 오히려 늘렸다. 경제활동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액을 징수하는 인두세는 흉작 때 생계위기선 이하로 농민을 밀어넣는 가장 가혹한 세제다. "먹을 것도 충분히 없으면서 기꺼이 세금을 내려는 사람은 없다"(스콧, 192쪽)는 선교사의 말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도덕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반응이었다.

공산당이나 사야산의 지도력은 부차적 설명변수다. 공산당은 반란을 사후에 추인했고, 당 간부들은 농촌 경작자들의 구체적인 불만에 맞게 행동을 조직해야만 했다. 공산당이 "농민에

게 분노 대상에 관해 가르칠 필요는 거의 없었다"(스콧, 173쪽). 반란의 구조적 원인은 고정 과세가 생계선을 침해한 것이었고, 지도력은 그 분노에 일관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6장은 이 집합행동의 도덕적 기반을 이론적으로 심화한다. 스콧은 전통적 농업 질서에서 작동하는 두 도덕 원리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호혜성의 규범과 생계에 대한 권리다. 지주는 흉작 때 소작료를 낮추고 기근 때 창고를 여는 의무를 지고, 농민은 그 의무 수행을 자신의 권리로 간주했다. 이 균형이 식민지화와 자본주의 시장 침투로 일방적으로 파기될 때 농민의 반응은 좌절이 아니라 분개였다. 농민 반란은 상향 이동의 열망이 아니라 "공격당하고 있는 생계 배열을 지속시키려는 절망적 노력"(스콧, 253쪽)이었다.

IV. 두 이론의 대화

올슨과 스콧은 동일한 질문—합리적 개인은 언제 집합행동에 나서는가—에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 올슨에게 집합행동은 선택적 유인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스콧에게 집합행동은 도덕경제가 침해될 때 선택적 유인 없이도 발생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인간 행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올슨의 합리성 모델은 단일하다. "합리성=기대이익 극대화" 이 모델은 집합행동의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는 데 강력하다. 무임승차 유인이 왜 대규모 집단을 마비시키는지, 왜 소수의 특수이익이 다수의 공공이익을 압도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모델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도덕적 분노다. 올슨의 틀에서 분개는 설명 불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이거나, 사회적 유인의 일종으로 환원될 것이다.

스콧의 합리성 모델은 다원적이다. 합리성의 준거는 행위자의 구조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생계위기선 근처의 농민에게는 손실 최소화가 합리적이다. 도덕경제가 침해될 때는 기대이익 계산을 압도하는 도덕적 논리가 작동한다. 이것은 비합리가 아니다. 도덕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도덕적 우주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스콧이 포착한 것은 올슨이 설명하지 못하는 바로 그 영역이다.

올슨은 집합행동의 구조적 조건—선택적 유인의 부재가 어떻게 집합행동을 억제하는지—을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스콧은 도덕경제의 위반이 어떻게 그 구조적 조건을 돌파하는 동력을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올슨이 집합행동의 필요조건을, 스콧이 충분조건을 각각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집합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올슨)와 그럼에도 발생하는 이유(스콧)를 함께 읽을 때 비로소 더 온전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V. 한국적 적용

1. 올슨으로 읽는 1987년 대투쟁의 역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3,000건 이상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노동쟁의 건수를 능가하는 것이었다(구해근, 223쪽). 올슨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역설이다. 수십만 명의 산업 노동자는 전형적인 잠세적 집단이다. 어느 개인의 행동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택적 유인도 없었다. 오히려

집합행동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었고 극도로 위험했다.

더욱이 구해근이 강조하는 것은 이 투쟁의 자발성이다. “이전의 파업과는 달리, 이번 대규모 노동투쟁은 외부 지식인집단의 주도나 적극적인 지도 없이 발생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집단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였다”(구해근, 233쪽). 올슨이 예측한 잠세적 집단의 침묵이 아니라 폭발적 집합행동이 발생한 것이다. 올슨의 이론만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2. 스콧으로 읽는 한국 노동자의 도덕경제

구해근의 분석은 스콧의 도덕경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임금인상만을 위한 경제적 투쟁이 아니었다. 구해근이 보여주듯 노동자들의 요구 목록에는 “조장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 폐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동자 간의 지위구분 철폐, 식사의 질 개선, 복장과 머리길이에 대한 규제 철폐, 강제적인 아침체조 중단”이 포함되었다(구해근, 231쪽). 이것은 이익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 존엄성—도덕적 권리—의 요구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공순이·공돌이라는 호칭으로 사회적 멸시를 내면화해야 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는 공순이.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는 공돌이. 공순이, 공돌이는 천한 애들”(구해근, 190쪽). 여기에서 도덕적 분노의 원천이 보였다.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살았다. 이것은 스콧이 말하는 도덕경제의 침해—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빼앗겼다는 감각—의 한국적 형태다.

구해근은 1987년 대투쟁을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자들의 한(恨)이 폭발하고 분출되는 계기였다”(구해근, 231쪽)고 학생출신 노동자 박동의 견해를 전한다. 이 ‘한’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다. 스콧의 분개 개념에 정확히 대응한다. 분개는 어떤 방해 원인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며, 규범 위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포한다. 2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멸시와 모욕—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의 부정—이 6.29 선언이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과 결합하면서 대투쟁으로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올슨과 스콧은 상호 보완적이다. 올슨의 논리는 왜 한국 노동자들이 20년간 침묵했는지를 설명한다. 국가의 강제력이 부정적 선택적 유인의 역할을 했고, 노동자들은 잠세적 집단으로 조직화 불가능 상태에 묶여 있었다. 스콧의 논리는 그 침묵이 왜 1987년에 폭발했는지를 설명한다. 도덕경제의 침해가 임계점을 넘어섰고,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가 도덕적 분노의 표출을 가능하게 했다.

VI. 결론

올슨과 스콧은 각자의 방식으로 집합행동의 조건을 해명한다. 올슨은 합리적 개인들이 왜 공동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스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행동이 발생하는 도덕적 동력을 포착한다. 두 이론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집합행동의 구조적 조건(올슨)과 도덕적 동력(스콧)—을 이룬다.

구해근의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이 두 차원이 모두 필요한 복합적 사례를 제공한다. 한국의 1987년 대투쟁은 구조적 조건(올슨: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국가 강제력의 약화)과 도

덕적 동력(스콧: 축적된 한과 인간적 존엄성 회복의 요구)이 결합하여 발화한 사건이었다. 이 집합행동은 이익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멸시와 모욕에 맞서 자신의 도덕적 우주를 지켜내려는 노력이었다.

올슨의 틀은 민중을 구조에 포획된 합리적 계산자로 환원한다. 스콧의 틀은 민중의 도덕적 주체성을 복원하지만, 도덕경제가 침해되지 않는 한 집합행동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구조에 포획되어 도덕경제가 침해되지 않은 민중은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남긴다.

참고문헌

헤라르도 뭉크·리처드 스나이더 인터뷰, 정치학 강독 모임 옮김,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었나2』, 서울: 후마니타스, 2012.
맨슈어 올슨 지음, 최광·이성규 옮김, 『집단행동의 논리』, 서울: 한국문화사, 2013.
제임스 스콧 지음, 김춘동 옮김, 『농민의 도덕경제』, 서울: 대우학술총서, 2004.
구해근 지음, 신광영 옮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경기: 창작과 비평사, 2002.

사용 AI 도구: gemini
활용 단계: 함께 읽기, 토론, 평가
활용 비중: 이해과정과 평가에 활용
프롬프트: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내 글의 논리적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
검증 과정: ai의 주장을 원문 확인하며 불일치 또는 오류는 기각
본인 기여 내용: 기획 및 작성, ai 도구는 조수 및 동료 역할 수행